



최근 독일의 복지개혁 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연금 및 의료보험 개혁 정책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독일

박명준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동아시아학부 전임연구원)

■ 머리말

2003년에 단행된 노동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하르츠 개혁이 독일의 사회복지체제 전반의 총체적 변화를 불러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을 전후로 하여, 지난 약 10년 동안 독일의 복지개혁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향성하에서 심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¹⁾. 그러한 복지체제 개혁 정책의 실행 과정은 독일 사회 내에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켜 왔으며, 특히 독일 노동운동 진영은 적녹연정, 흑적대연정 그리고 지금의 흑황연정에 이르기까지 그 시기 동안 일관되게 진행되어 온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전통적으로 스스로를 ‘사회정책행위자(Sozialpolitischer Akteur)’로 인식을 해온 독일노총(DGB)²⁾은 지난 10년간 진행되어 온 소위 신자유주의 복지 약화 개혁에 대한 반개혁(counter-reform) 담론의 핵심 주체들 가운데 하나였다.

- 1) 독일의 복지체제 개혁과 관련한 국내 학술 문헌들로는 김원섭(2007), “최근 독일 연금개혁과 복지 국가의 발전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3(2), pp.161~188; 이정우(2004), “독일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사회정책』 11, pp.59~103; 그리고 제갈현숙(2007), “독일 적녹연정 시기 의료보험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1, pp.149~176 등이 있다.
- 2) DGB 웹사이트, “Der DGB als sozialpolitischer Akteur”, http://www.dgb.de/uber-uns/bewegte-zeiten/60-jahre-dgb/heute/der-dgb-als-sozialpolitischer-akteur/@@index.html?tab%3DAlle%26display_page%3D4%26k%3Alist%3DSozialpolitik%26k%3Alist%3DRente

최근 DGB는 자신의 전통적 정치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이 실각한 이후, 흑황보수연정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에 대해 더욱더 날카로운 대응 논리를 구사하면서 사회적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5월 4년마다 개최되는 DGB 제19차 전국총회에서 표방되었듯이, DGB의 슬로건은 작금의 독일 정부의 정책은 종래의 독일식 사회국가(Sozialstaat)를 약화시켜 사회부조국가(Sozialhilfestaat)로 전락시키는 방안이며, 그에 맞서 사회연대적 복지개혁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것이다³⁾.

이 글에서는 여러 사회복지 정책들 가운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금개혁 및 의료보험 개혁 방안에 대해서 최근 독일노총이 표출한 대응 논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겠다. 글의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 1차 문헌들을 중심으로 한다. 이는 독일 복지개혁의 현재적 그리고 미래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 역량의 강화가 필요한 한국 노동조합을 위해서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현 독일 정부의 연금 및 의료보험 정책⁴⁾

현 흑황보수연정 정부의 사회복지개혁 정책의 주된 기조는 경쟁력 강화와 장기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의 확충에 있다. 그 중에서도 연금시스템은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수급액의 인상을 제어하는 방안을 유지하고 있고, 민간 연금체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법정 퇴직연금 수령자 연령을 67세로 증가시키는 방안에 힘을 주고 있다. 이는 지난 흑적대연정(2005~2009) 하에서 의결된 것으로 지금의 흑황 보수연정의 연금보험 정책 가운데 가장 첨예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 DGB 웹사이트. 2010년 5월 16일자. "Buntenbach: Solidarische Reformen statt Sozialhilfestaat". http://www.dgb.de/presse/+ +co + +75d11bce-6100-11df-79f5-00188b4dc422 /@@index.html?tab%3DAlle%26display_page%3D3%26k%3Alist%3DSozialpolitik%26k%3Alist%3DRente

4) 독일에서 연금 정책은 연방노동사회부(BMAS)가, 의료보험 정책은 연방보건부(BMG)가 각각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이 제도의 필요성으로 몇 가지 근거를 대고 있는데, 그것은 이 제도가 현재의 인구학적인 발전 과정에 부합하는 방안이고, 세대간 정의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며, 공적 연금보험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의 결핍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이라는 것이다⁵⁾.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 대한 회의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미 작년 9월, 당시 연정의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기사연(CSU)은 이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⁶⁾.

한편, 의료보험의 경우 현 정부의 출범 이후 자민당(FDP) 소속의 젊은 정치가 뢰슬러(Rösler)가 연방보건부(BMG)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핵심 의제는 공적 의료보험체계(GKV)의 재정 문제 해결방안인데, 특히 작년 경제위기 때 대연정 정부가 마련한 제2차 경기부양책에서 일자리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들의 부담을 줄기 위해 확정한 의료보험 분담금의 동결방안을 해지하고 내년부터 이를 다시 기존의 노사 공동의 분담율인 14.6% 수준으로 올리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노동자들만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0.9%의 특별분담률은 계속해서 유지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내년에 약 60억 유로의 추가재원 확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⁷⁾. 이에 더하여 현 정부는 소득과 무관하게 피보험자들의 일괄적 추가 부담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정책 방향을 세우고 있다. 그 일환으로 여러가지 정책들의 새로운 도입이 모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사전지불제(Vorkasse)와,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피보험자들이 월 29유로씩 추가 지불을 하는 ‘두당정액제(Kopfpauschale)’ 등이다.

5)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웹사이트. http://www.bmas.de/portal/41130/2009_12_15_rente_mit_67.html

6) DGB 2009년 9월 7일자. “Seehofer und die Rente mit 67: Härtetest kommt 2010”, <http://www.dgb.de/themen/+ +co + +5ced879a-216e-11df-677d-00093d10fae2/@@index.html>

7) 독일 연방보건부 웹사이트. 2010년 8월 3일자. “Die Gesundheitsreform”. http://www.bmg.bund.de/cIn_178/nn_1945390/SharedDocs/Standardartikel/DE/AZ/G/Glossar-Gesundheitsreform/Rechenbeispiele-Gesundheitsreform.html?__nnn=true

■ 연금 정책에 대한 노조의 대응과 입장

연금 정책과 관련하여 독일노총(DGB)은 공적연금체계의 강화, 연금수급액 삭감 중단, 그리고 ‘67세 연금제’의 철폐를 주된 주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가운데 마지막 주제는 현재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DGB도 그에 대해 가장 크게 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보험의 강화

DGB는 기본적으로 공적연금보험의 강화를 주창하면서, 그것의 운영방식상의 개선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9년 9월에 연방보험청에서 활동보고서를 제출했을 당시 2007년에 제출된 연금 신청안의 1.3%가 수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재발방지책을 강력히 요구했고, 신규 연금신청자들이 원활하게 연금을 수령해 갈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자문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을 역설했다. 동시에 공적연금조차 여러 가지 행정상 결함을 통해 신뢰의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민간보험의 정글로 국민들을 이끄는 것은 연금의 신뢰도를 더욱 낮추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현재의 추세에 대해서 비판을 가한다⁸⁾.

연금수급액 삭감 반대

DGB는 연금수급액의 삭감을 제어하려 한다. 연금수급액 25% 삭감 결정도 현재의 연금의 위기와 고령자들의 빈곤화 경향에 대해서 전혀 적절한 대응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연금수준을 더 이상 낮추어서는 안 되며, 그것은 이미 충분히 낮다는 인식이다⁹⁾. 그러한 맥락에서 현 정부의 연금

8) DGB 2009년 9월 8일자. Rentenversicherung: Kritik darf nicht zu Verunsicherung führen. http://www.dgb.de/presse/++co++4896045c-1561-11df-4ca9-00093d10fae2/@@index.html?tab%3DAlle%26display_page%3D4%26k%3Alist%3DSozialpolitik%26k%3Alist%3DRente

9) DGB 웹사이트 2010년 3월 17일자, “Rentenprognose alarmierend”, <http://www.dgb.de/themen/++co++4d6a1d44-31d4-11df-6666-00188b4dc422>

정책을 빈곤생산기제(Armutszeugnis)라고 비판하며¹⁰⁾, 연금의 보장을 유지해야 함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다.¹¹⁾

67세 연금제 반대

67세 연금제(Rente mit 67)에 대해서도 DGB는 강하게 반대한다. 그 근거로 오늘날 임금근로자들 가운데 넓게 잡아 겨우 20%만이 종래의 정규직 고용관계로부터 법적 퇴직연금 수령관계로 정상적인 이전을 하고 있는 사실을 내세운다. 과거의 정상적인 이전모델은 근래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조기퇴직이나 고령자들의 조업단축 등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¹²⁾. 심지어 지난 3월에 발표된 독일경제연구소(DIW) 분석 결과에서는 겨우 정규고용자의 10분의 1만이 연금수급자로의 정상적인 이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¹³⁾. 그러한 맥락에서 ‘67세 연금제’ 방안은 그러한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는 것이 DGB의 입장이다.

DGB는 퇴직연령을 67세로 높이면 정상적인 연금생활자로의 이전 비율을 더욱 낮출 것이며, 이는 공극에 연금부담액을 높이고 연금수령액을 줄이는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⁴⁾. 현 노동사회부 장관이 67세 연금 제도를 예외없이 모든 직업 집단에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하겠다는 내용의 의지를 밝히자, DGB는 그것이 실제 생애 상태로부터 ‘멀어도 한참 먼(meilenweit entfernt)’ 인식이라는 주장을 펴며 반박한다¹⁵⁾.

/@@index.html?tab%3DAlle%26display_page%3D2%26k%3Alist%3DSozialpolitik%26k%3Alist%3DRente

10) DGB 웹사이트. 2010년 7월 21일자. “Rentenpolitik der Koalition ein Armutszeugnis”. <http://www.dgb.de/themen/++co++16963cb0-94cd-11df-70b3-00188b4dc422/@index.html?k%3Alist%3DSozialpolitik%26amp%3Bk%3Alist%3DRente>

11) DGB 웹사이트. 2010년 7월 26일자. “Rentengarantie muss bleiben”. <http://www.dgb.de/themen/++co++ecb5a158-98c6-11df-6d7e-00188b4dc422/@index.html?k%3Alist%3DSozialpolitik%26amp%3Bk%3Alist%3DRente>

12) DGB 2009년 9월 7일자. 상계문

13) DGB 웹사이트 2010년 3월 17일자. 상계문

14) DGB 웹사이트 2010년 3월 17일자. 상계문

DGB는 대안으로 고령자들에게 보다 많은 ‘좋은 일자리’와 퇴직으로의 보다 ‘유연한 이전’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⁶⁾. 즉 필요한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55세 이후 60대 노동자들의 고용기회를 증대시키는 것이지, 수동적으로 그들의 퇴직연령을 67세로 늘리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단지 ‘길게 일하고 적게 받는 것’일 뿐이다¹⁷⁾. 고령자들의 조업단축(Altersteilzeit)은 강화되어야 하고 부분연금(Teilrente)은 보다 매력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고령노동자들 및 장년노동자들이 노동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도록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이 기업 내에서 보다 나은 숙련화를 향한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67세 연금’은 잘못된 결정이며,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⁸⁾.

한편,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 DGB는 법률 안에 소위 ‘점검조항(Überprüfungsklausel)’을 집어넣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관철시킨 바 있다. 그에 의하면, 고령노동자들의 고용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정부가 2010년부터 매 4년마다 총체적인 실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¹⁹⁾. 그 첫 해인 올해에 노동시장이 법적 퇴직연령의 증가를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DGB는 사후 압력을 통해 ‘67세 연금’ 방안의 실행을 저지한다는 입장이다²⁰⁾.

15) DGB 웹사이트. 2010년 4월 14일자. “Rente mit 67: Meilenweit entfernt von der Lebenswirklichkeit“. <http://www.dgb.de/themen/+co++4401c596-47db-11df-5121-00188b4dc422/@index.html>

16) DGB 2009년 9월 7일자. 상계문

17) DGB 웹사이트 2009년 11월 2일자, “Rente mit 67: Länger arbeiten für weniger Geld”, http://www.dgb.de/themen/+co++7d533db6-6cc5-11df-59ed-00188b4dc422/@index.html?tab%3DAlle%26display_page%3D2%26k%3Alist%3DSozialpolitik%26k%3Alist%3DRente

18) DGB 웹사이트. 2010년 8월 9일자. “Renten: Fehlentscheidungen korrigieren“. <http://www.dgb.de/themen/+co++7f9eedf2-a3ae-11df-6fd9-00188b4dc422/@index.html?k%3Alist%3DSozialpolitik%26amp%3Bk%3Alist%3DRente>

19) DGB 웹사이트. 2009년 9월 7일자. 상계문

20) DGB 웹사이트 2009년 11월 2일자. 상계문

■ 의료개혁에 대한 노조의 대응과 입장

의료보험 개혁 정책에 대해 DGB가 핵심적으로 천착하는 주제는 공적의료보험체계의 재정운영상의 안정성 확보와 그 과정에서 피보험자들 및 노동자들의 이해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현재 DGB는 각각 사전지불제 도입 반대, 연대적 재정원리 확립과 사용자들의 보험부담액 증가, 효율 기금의 마련, 그리고 두당정책제 도입의 저지 등을 내세우며, 이를 전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키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경주하고 있다.

사전지불제 반대

최근 DGB는 정부가 법정 의료보험의 비용대체(Kostenerstattung) 방안의 도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자 정부의 비용대체 논리가 갖고 있는 두 가지의 결정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하나는 투명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독일 의료보험체계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사실성 원칙(Sachleistungsprinzip)’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전지불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많은 피보험자들이 더 큰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²¹⁾. 사전지불제는 일부 의사들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으로서, 환자로 하여금 일단 일정액의 현금을 진료비로 지불토록 하고, 진료 후에 의료보험사와의 정산을 마친 후에 되돌려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DGB는 “환자들은 고객이 아니며 병원은 자동차 수리소가 아니다”는 모토하에 그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연대협약의 체결과 사용자 부담 증액

DGB는 최근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긴축재정이 의료보험 부문에서 피보험자들과 노동자들에게 일

21) DGB 웹사이트. 2010년 7월 15일자. “Gesundheit: Transparenz ja – Vorkasse nein”. <http://www.dgb.de/presse/++co++d29febe6-8ff9-11df-70b3-00188b4dc422/@@index.html?k%3Alist%3DSozialpolitik%26amp%3Bk%3Alist%3DGesundheit>

방적인 부담 증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 인식에 기초하여, 예상되는 재정압력의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소위 ‘공적의료보험을 위한 연대협약(Solidarpakt für GKV)’을 주창한다. 의료보험에 대한 사회연대적인 부담을 주창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DGB는 사용자들의 부담액 증설을 역설한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된 0.9%에 이르는 노동자-특별부담률만큼 사용자들도 동일한 수준에서 특별부담액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사용자부담액의 인상 동결안을 겨냥한 비판 방안이다. 나아가 DGB는 연대협약과 함께 ‘건강기금(Gesundheitsfond)’의 100% 재원조달을 통하여 비사회적인 추가 부담의 증대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²²⁾.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말 DGB개혁위원회는 미래의 의료보험을 위한 방안으로 ‘연대적 보건의시스템(Solidarisches Gesundheitssystem)’을 모토로 내걸고 위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핵심 요구안을 발표키로 하였다²³⁾. 이는 자연스럽게 현 정부의 의료보험 정책의 핵심 방안인 두당정액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두당정액제 반대

DGB는 두당정액제를 비판하고 저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²⁴⁾. 그 주요한 논리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소득이 월 1,000유로에 이르는 저소득층과 연금소득자들은 연금분담금으로 7.9%를, 즉 79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서 근로자

22) DGB 웹사이트. 2010년 6월 17일자. “Gesundheit: DGB fordert Arbeitgeber-Sonderbeitrag”. <http://www.dgb.de/presse/++co++e93ddf66-79fb-11df-6571-00188b4dc422/@@index.html?k%3Alist%3DSozialpolitik%26amp%3Bk%3Alist%3DGesundheit>

23) DGB(2010), “DGB Reform-Kommission - Für ein solidarisches Gesundheitssystem der Zukunft”, Sozialpolitikaktuell. Nr. 8. (2010년 7월 1일자) 혹은 <http://www.dgb.de/presse/++co++149b4f6a-84ea-11df-6571-00188b4dc422>

24) 이미 지난 2월 DGB는 자신들의 사회정책 관련 주간간행물 (Sozialpolitik aktuell)에서 특별호로 이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어 비판적인 의견을 정면으로 개진기도 하였다. DGB(2010), “Sonderausgabe-Kopfpauschale”, Sozialpolitikaktuell. Nr.2 (2010년 2월 22일자) http://www.sozialpolitik-aktuell.de/tl_files/sozialpolitik-aktuell/_Kontrovers/Gesundheitsreform/Gesundheitsfonds/100223_DGB%20hinweise_kopfpauschale_dgb_sozpol_aktuell_2-10.pdf

들의 특별분담분인 0.9%를 제하고, 거기에 두당정액 추가분담금으로 29유로를 지불해야 할 경우 월 99유로를 지불하도록 되어 이는 현재보다 20%(20유로)가 더욱 더 증액된 방안이 되고, 근로자 특별분담분을 유지할 경우, 총 지불액은 108유로가 되어 이는 현재보다 36.7%나 인상된 액수가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을 해 보면, 월 2,500유로 정도의 평균 소득자의 경우 3.3%에서 14.7%까지 더 지불하게 되는데, 그것이 상위 소득자로 올라갈수록 추가분담 비율은 적어진다²⁵⁾. 결국 두당정액제는 저소득층에게 압력을 가하는 불평등한 시스템이라는 것이 DGB의 논리의 핵심인 것이다. 특히 사용자의 부담을 동결시킨 상태에서 두당정액제가 도입될 경우 그것은 단지 피보험자들의 추가부담으로 귀결될 뿐이라는 것이다²⁶⁾. 최근 DGB의 미하엘 쯘머 의장은 한 인터뷰에서 “현정부의 정책은 궁극적으로 노사가 동등한 참여를 통해 보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오래된 원칙에서 이탈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하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부담액의 징수를 넘어 두당정액제를 추진하는 것을 ‘탈연대화(Entsolidarisierung)을 향한 징후’라고 규정한 바 있다²⁷⁾.

효율기금의 마련

연대적인 방식의 재정안정화 구축에 더하여 DGB는 효율기금(Effizienzreserven)의 마련을 주창하고 있다. 이는 재정긴축시 그것이 고용정책상에 가져다 주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여 단기적 긴축 효과가 노동자들의 고용상황을 악화시키거나 혹은 그들을 해고로 이끄는 방안을 최대한 피하는 방안을 추진하듯이, 마찬가지로 공적의료보험의 서비스의 내용 면에서도 그 서비스 범위가 위축

25) DGB(2010), “Testballon “kleine” Kopfpauschale: Versicherte werden abkassiert”, Sozialpolitikaktuell, Nr.3 (2010년 3월 16일자) http://www.stoppauschale.de/fileadmin/user_upload/Presse/Sozialpolitik-aktuell-3-2010-Kopfpauschale.pdf

26) DGB 웹사이트. 2010년 7월 6일자. “Gesundheit: DGB sieht Kampfansage an Bürger – Belastungswelle durch verkappte Kopfpauschale”. <http://www.dgb.de/presse/++co++a4dcccfa-8906-11df-6571-00188b4dc422/@/@index.html?k%3Alist%3DSozialpolitik%26amp%3Bk%3Alist%3DGesundheit>

27) DGB 웹사이트. 2010년 7월 13일자. “Interview – Michael Sommer: Kopfpauschale durch die Hintertür”. <http://www.dgb.de/themen/++co++ecfa03a6-8e5c-11df-537b-00188b4dc422>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것을 위해 DGB는 개업의들의 소득 인상, 제어, 의약품 도매 상들을 위한 할인 제공이 피보험자들과 그들의 보험 회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되도록 하는 방안 모색, 그리고 공적의료보험 회사들을 위한 약국의 할인(Apothekenrabatt)을 인상시키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²⁸⁾.

■ 맺음말

하나의 사회정책 행위자로서의 노동조합은 독일 사회 내에서 중요한 위상을 지닌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독일의 사회보험 개혁 정책에 있어서 DGB가 취하는 입장은 공적보험체계의 유지와 사회연대적이고 평등한 보험재정의 분담에 맞추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DGB의 대응 논리의 핵심적인 내용은 종래의 공적연금체계의 강화, 연금수급액의 삭감 저지, 그리고 67세 연금제에 대한 비판 등으로 요약될 수 있고,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사전지불제 반대, 사용자들의 부담 증액, 두당정액제 저지, 그리고 효율기금의 마련 등이 핵심 주장들이다.

현재 DGB가 표방하는 반개혁의 대응 논리는 사회연대의 혁신적 재구축과 독일 사회국가를 역동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DGB의 입장이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상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더 깊은 논구가 필요할 것이나, 일단 DGB의 목소리는 독일 사회의 개혁을 둘러싼 담론장에서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독일 복지개혁의 방향을 가름하는 데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향후 독일 복지개혁의 주요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 정치의 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떠한 다이내믹이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KLI**

28) DGB 웹사이트. 2010년 6월 17일자. 상계문